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번 11호에서는 일반시민, 문화기관 및 문화재단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말하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이슈들을 엮어 보고, 올해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첫 연구결과물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돌아보았습니다.



## Contents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p.03 **칼럼**  
[지방분권, 왜? 무엇을? 어떻게?]  
박재울(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p.05 **이슈1**  
[문화분권]  
이청산(한국민예총 이사장)
- p.10 **이슈2**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 찾기]  
김영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전문위원)
- p.13 **이슈3**  
[문화분권시대, 문화재단 구성원의 자치역량은?]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 p.16 **예술+협력**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대하는 동남권 문화협력]  
장원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 p.18 **정책보고서 훑어보기**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 p.21 **7~8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최근 정부는 이견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기증 미술작품들을 소장할 미술관 건립 장소로 서울을 선택, 발표하였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민 접근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았다며, 당연하다는 듯 서울 건립을 공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는 11.8%의 국토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이 곧 위기임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에 이르는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이 가운데 97곳, 92%가 비수도권이고 부산 조차도 위험지수 0.5에 가까운 0.69다.<sup>1)</sup>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지속되는 ‘공정’ 논란도 특권적 사교육을 통한 부와 신분의 세습이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견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또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0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표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결정, 통보만 있었다. 적나라한 중앙집권의 모습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한 지역 집중의 일원적 국민 접근성이 아니라 여러 지역 분산의 다원적 접근성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일극적 발전에서 다극적 공간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분권과 권역별 분산, 분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분권, 분산, 분업의 3분 전략, 실행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80년대를 거쳐 동서냉전이 와해되는 9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된 ‘세계화, 지방화’(글로벌라이제이션)라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핵심은 사람과 업무와 재정이다. 부산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진 해양도시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나아가는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부시장도 없다. 법령상 부산은 두 명의 부시장 밖에 둘 수 없다. 인구 800만 이상만 3명을 둘 수 있어 서울과 경기도만 해당된다. 부산시 실,국 단위 등 주요 조직을 새로 늘리려면 일일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걸맞은 제도, 규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조례가 그것이다. 그런데 조례는 지방자치법 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얽매어 있다. 이른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안에서만 지역의 모든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는 법제처에서 파견한 직원이 조례 제, 개정 과정에 중앙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실상 감독에 해당하는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자연히 고유한 자치업무의 비중도 중앙정부 업무에 비해 적다. 중앙정부 사무와 지방사무가 대략 6:4 정도인데, 공동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사무는 집행 중심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율적인 체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 역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6.4:23.6(2019년 결산 기준)이다. 지출은 지방정부가 60, 중앙정부가 40의 비율이다. 더 많이 쓰는 지방정부가 수입은 적으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람과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역민의 의사와 요구가 다원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1)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지역소멸 위험지역 현황」, 2020.5.

수도권 중심으로 주요 정책이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이건희 미술관'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 집권 체계를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 시키지 않으면 수도권 삶의 질도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증가, 환경, 교통 등 생활여건은 악화일로로 걸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곧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그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참여권 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조례 제정범위를 최소한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정도라도 보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방소비세 확대와 일정한 자주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지역 간 세수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재정조정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당장 일일이 사업항목과 범위를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국비에 맞추어 지방비를 배정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지역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양부시장, 문화부시장 등 지역 조건에 맞게 행정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투표, 주민발안 등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지방 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운영 체계 자체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고쳐야 한다.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는 세월의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이 바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17조, 118조, 단 두 개 조항뿐이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95년 지방정부(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주민자치권, 국민참여권 등의 신설, 40조의 국회만의 입법권 독점,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대한 법률 독점권 개선 등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결과였다. 권력구조 개편은 민감한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집권과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와 위기를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정파간 쟁점이 적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헌법 개정은 집권자들의 권력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 되어온 데 대한 거부감, 그리고 헌법은 법률과는 달리 아주 뜬금없이 손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남아있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독재적 권력이 대한민국에 발붙일 곳은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사회변화와 시대전환의 역동성이 이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미 검증되었듯이 그 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내년 3월에는 20대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이어진다.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관련 법령 제,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 지방분권형으로 국가 운영 체계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여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다원적이고 다극적인 지역 공간 창출로 주민의 삶,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더 성숙한 공동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단체만이 아니라 각 계 시민 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집결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4월 고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3,181점(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기증품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위원회가 정한 기본 원칙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②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③ 전문 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④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이다. 그리고 결국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 두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소장품관(약칭 :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두 가지 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일명 이건희 컬렉션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지방정부가 과열경쟁을 했다. 위원회가 정한 첫 번째 원칙인 국민의 문화향유기회의 확대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시 되었다고 여긴다. 한국은 도시전체를 새로이 만든, 빌바오 효과를 얘기한 스페인처럼 넓고 광활한 국가가 아니며, 전국이 3시간이면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가진 국가이다. 역으로 수도권에 많은 국민이 산다고 문화를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치적으로는 그럴지 모르나 문화향유기회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향유는 균형발전을 동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작은 나라를 더 작게 만들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한국의 현실에 기반한 주장이다. ‘한국식 빌바오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했다. (빌바오 효과란 문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뜻한다. 쇠퇴해가던 스페인의 지공업도시 빌바오가 1997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문화향유의 균형발전이 바로 ‘한국식 빌바오 효과’일 것이다. 이 문제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식 빌바오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 어느 곳에 ‘이건희 기증관’을 두어도 우리 국민들 모두는 충분히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누릴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역시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핑계로 들린다. 결국 보다 담대한 논의를 통하여 문화분권과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타파하는 결과가 나와야 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명칭의 문제이다. 왜 새로이 설립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이건희 기증관’으로 한정하는지 의문이다. 마치 국내 최대 기업에게 찬사를 보내기 위함 같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큰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좋은 계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국가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이건희 기증관’이라 명명할 것이 아니라 신축 국립현대미술관의 내용에 담겨야 할 문제다. 이후 이어질 국가기증의 수용을 염두에 두어도 그렇다. 또한 재벌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감안할 때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가 문화정책부재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네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은 국회사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임초의 공언대로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말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성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문화 자치와 지역문화 분권이다. 국가가 자유경쟁시장에 끊임 없이 개입하고 간섭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현상 해소는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지방 분권’이다. 지역주민이 도시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도시가 미래도시의 모델이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의미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의 보완과 문화 분권, 지역문화의 자율성 강조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 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실현가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라는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은 과연 가능한 일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라는 개념 중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서 지역에 핵심적인 가치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자치로의 이행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자율성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은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분권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민간기구와의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관주도의 문화정책은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분권의 경우, 현재처럼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문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및 집행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분권은 말 그대로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때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매우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이양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분권은 문화자치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자 지향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재구성, 산하 기관들의 통합도 필수이다. 문체부는 국가 문화행정의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고, 직접 사업은 산하 기관과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문체부와 광역문화재단간 새로운 관계 설정도 요구된다. 수직적인 사업 전달 방식이 아닌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 분권’, ‘지역의 자율과 책임’등의 기본원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이양 사업을 대폭확대, 광역 단위의 정책 수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분야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선정하고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올바른 지역문화의 정착은 지방분권의 큰 틀 속에서 ‘문화분권’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 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국민이 문화 예술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 예술 창조의 주체로 거듭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지역이 스스로 지역 문화 예술이 주체가 될 때만이 지속적인 지역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지방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단체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재차 확인했다.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며 책임지는 문화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핵심 가치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지역과 세대는 물론 계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진흥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한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 존중과 문화의 개방성, 다양성, 존중이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문화적 중앙과 문화적 지방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균점과 지역 문화의 자율성 확립이 중요하다. 전자는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를 지역에서 균점하며 국내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각 지역에서 독자성을 가진 문화를 창조하며 국내에 있어서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지역문화의 진흥이자 문화 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1995년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문화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국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예술활동의 진작 문화 복지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보다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문화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보도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 문화생산, 문화소비 등이 중앙에 집중되어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문화의 중앙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권화의 노력이 문화 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와 예술의 분리와 더불어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역문화재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 대행기관이 아니다.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민이 재물을 모아 자율적 독립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도록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문화재단 또한 ‘예술가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행정가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문화재단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이름의 관행의 굴레 갇혀 가능성도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술의 가능성마저 행정의 편의성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지점이 있다.

자신의 창의성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오롯이 예술인의 몫이지만, 예술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건 사회의 몫이 아닐까. 그 몫을 문체부와 문화재단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를 해석하고 정책화하는 방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한 협의의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근래 문화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한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화가 전제 되었을 때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자치, 포용, 혁신의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 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 하나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의 개념과 역할의 확장은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를 전제 하기도 한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 역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만하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의 대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변화가 시작 되고 있음을 많은 지역에서 사례로 보여 주고 있다. 예술중심이거나 전통문화 중심 또는 기득권을 형성해온 지역 내 정치적 영역 까지를 넘어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는 세대나 영역을 넘어서는 시민주체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역할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문화자치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해답의 단서가 되고 있다.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시민주체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구들을 전개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민 누구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전제로 가능해 진다.

그렇게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다만 우려할 지점은 무작위의 몇 사람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구현 하려는 구조를 시민문화생태계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화 단계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방법론이 등장해야 한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문화적 삶”이란 것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공인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을 이야기하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제대로 말 한번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을 다음 세대에 유전처럼 물려 줄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계급유전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이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천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용오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을 보듯이 개천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기회의 장이 만들어 져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각성으로부터 새로운 생태계가 정치적 입장과 자기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문화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각성과 의지와 욕구를 만들어 가는 문화적 방법론들이 그간의 다양한 사례들이 그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그것은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해석과 설계가 지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꾸려지고 만들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홍보도 하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고 자기역할을 다했다는 행정과 공공의 치부는 이제 다른 접근법들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 있을 때만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방식의 전환, 참여와 경험이 만들어 가는 욕구와 삶의 변화를 해석하고 응원하는 과정. 일터와 삶터를 문화적인 공간이나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관계를 통한 확장과 역할 재설계등 욕구와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을 사는 모든 이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행정과 공공의 각성이 현장의 참여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민은 대상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화 자치의 경로이고 우리가 꿈꾸는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도시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문화자치와 더불어 문화분권의 경로는 이런 자치영역의 성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지향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협력과 연대의 행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분권을 위해 재정양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이 같이 공유되는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성, 로드맵 등은 수정

과 보안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획일화와 균질화를 넘어 지역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 되어야 한다. 정책목적이라는 것을 넘어 개념과 방법론들이 무시 될 때 사업의 가치나 효과를 기대하기 점점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사업예산만 남고 정책 목적과 지향이 무너지면서 문화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과 예산이 이양 될 때 사업의 정책목적이나 흐름, 체계 등이 같이 공유되고, 실천의지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정책 목적이 충분히 공유되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재구조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과 사업명만 넘어 가는 것은 분권의 방향이 아니다. 자칫 예산만 넘어가고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나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아우성이다. 그런 과정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조정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방 이양 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신청하면 선정하여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의 방향성 연구를 해주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방 이양된 사업들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 지고 정책목적에 맞는 방향

으로 유지 성장하게 할 것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치권의 의지가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이전을 안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분권의 로드맵에 대한 문화부의 의지나 정책적 실천방안들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광역단위로부터 실천하는 분권의 방법과 실천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초와 함께 논의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상향식 방식의 분권 구조가 가능 할 것이다.

기초와 광역에서 먼저 실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에는 자치역량의 강화가 기본이자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며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자치.분권 경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광역을 움직이는 담론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광역도 그런 경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며 제도와 재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담론을 기대하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 #1

2017년 1월, 제주재단은 재단 사상 최초로 3개의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는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1년 설립 이래 25명 내외로 묶여 있던 정원이 47명으로 증원된 것과 17년 동안 제주도 정기 인사에 맞추어 파견되던 사무처장제의 폐지가 그것이었다. 제주재단의 숙원이나 다름없었던 이 두 가지 이슈 혁파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그나마 증원 문제는 설립 당시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업무량과 예산액을 근거로 풀 수 있었지만 본부제 도입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와 반대로 한 달 가까이 정체를 겪어야 했다. 정원 51명부터 1본부 편제가 가능하다는 지방공기업법을 들어 기껏해야 정원 47명인 재단의 경우 3본부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기업을 토하는 공기업계를 설득하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재단은 공기업이 아니며, 정원 규모와 상관없이 이미 본부 체제를 갖춘 타 광역재단의 사례를 제시하고, 늘어난 사업량과 예산안을 근거로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본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었다. 동시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라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와 이미 협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공기업계가 태클을 거는 것은 재단을 칸막이 행정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어쨌거나 공방은 일단락되었고 제주재단의 사무처 폐지 및 공무원 파견 폐지와 본부제 도입, 정원 증원 등은 제주재단 17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될 만 했다.

## #2

2021년 7월, 재단 경영기획실장에 제주도 공무원이 파견되었다. 2020년 8월 기존의 본부제를 폐지하고 경영부서 3팀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동시에 직원의 약 80%를 이동시키는 인사발령 이후 11개월만이었다. 외부 인사 영입설, 공무원 파견설 등이 파다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 없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다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공모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사측이 제주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올해 3월 출범한 재단 노조는 사측의 공무원 파견 요청은 리더십 부재와 자립 경영의지 박약에서 비롯된 경영부실의 단면이라고 판단, 4차례의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집단 시위 등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 요청은 철회되지 않았고, 사측에 손을 들어 준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명분으로, 7월 2일자 정기 인사에서 재단 경영기획실장으로 4급 서기관 공무원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파견 공무원 신분의 경영기획실장은 인사, 조직, 예산, 대외협력, 경영평가 등 기관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영기획부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제주재단이 자율성이나



2017년 한광연 정책워크숍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독립성이니,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니 등등을 부르짖으며 헐파했다고 믿었던 이수들은, 2021년 8월, 다시 우리 코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퇴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분권 시대와 문화재단. 이런 주제라면 대체적으로 문화분권 시대를 맞아 문화재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글이 되어야 할 성싶다. 문화분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분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등등의 꼬비우스띠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의들의 가닥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한국광역재단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정책포럼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목 놓아 주장했던 내용들일 터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라는 질문에는 딱히 내놓을 만한 답변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 유체 이탈식 사고와 화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늘 '문화재단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2018년 한광연 정책워크숍  
'문화분권시대, 광역문화재단 돌아보기'



당위성을 내세워 문화재단을 주어삼아 사고하다 보면 영혼 없는 '기관 역할론'에 빠지기 십상이다. 문화행정서비스 체계 속에 위치한 문화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 수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문화재단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탐구의 기억이 우리에게 없다. 물론 이러한 탐구가 쉽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이라는 이름의 기관장의 역할론과 자질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민감 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단 조직원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평가에 직면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탓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 자치제의 산물로서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재단의 역사가 '꺾인 반세기'가 된 지금, 우리는 내부를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문화재단이 주어(주체)가 아니라 문화재단 조직원이 주어(주체)가 되는 질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에 바탕을 둔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관장의 리더십만큼이나 문화재단 구성원이자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진정한 지역 문화분권과 문화 자치는 지역이 문화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우선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조직 자치 역량은 충분한지 성찰해야 한다.

글의 첫머리에 제주재단 사례를 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1과 #2에 나타난 기관장의 리더십의 양상과 역할 차이는 극명하다. 이를 두고 기관장의 자질론을 애써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 믿는다. 다만 문화재단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거대담론에 의해, 사회적 가치 판단에 의해, 탁월한 리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더욱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리더(기관장)의 시간'은 짧다. 이에 비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조직 구성원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고 이는 곧 '재단의 시간'을 이룬다. 핵심은 '조직 구성원의 시간'이 갖는 확장력이다. 조직에 발생한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변화해가며,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자발적 위기해결 및 갈등조정, 지속가능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확장력이야말로 조직 구성원의 자치역량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 과정에서 제주재단 구성원들이 얻은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공무원이 파견된 결과만으로는 실패사례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단 노조를 주축으로 한

적극적 현안 대응 경험이야말로 조직 구성원의 자치역량 필요성 인식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파견 이후 재단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단이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을 청원하였다. 물론 그 결과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도의회가 청원을 수용하는 대신 제주도로 토스했고, 제주도는 “도와 도의회 등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반전, 만회할 수 있는 힘 역시 ‘조직 구성원의 시간’에 있다고 본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문화정책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문화 재단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한다. 변화할 뿐더러 나날이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유체이탈식 문화재단 역할론만으로는 그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관장의 리더십이 문화재단의 역량을 규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문화재단 구성원은 어디에서 있는가,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문해야 한다. 조직의 자율성(自律性)은 조직 구성원의 실천적 자강(自強)으로 학습 배양된 자치(自治)역량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을 기점을 시작으로 ‘일일생활권’이 시작된지도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고 있다. KTX가 개통되면서 ‘반일생활권’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세계를 한시간내로 이동 시키겠다는 등 정말 빠르게 기술도 삶도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빠른 발전 속에서 중앙화, 집중화는 더 가속도가 붙고, 지역쇠퇴, 지역소멸에 대한 이슈는 이제 익숙하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어릴 적, ‘개천에서 용난다’를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용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 가자. 세계로 가자 등 열정과 욕심을 불태우면서 ‘용트림’을 하며 살아온 듯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세파에 등 떠밀려 나의 주관이 아닌 선택을 하거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온 듯한 착각, 어쩌면 크게 의미 없는 몸부림으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세뇌로 탈출구만을 찾지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오랜시간 김해를 중심으로 실용음악학원, 대안학교, 대학강의 등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 남아 함께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자는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목표는 인서울, 인수도권이었기에 그 이야기들이 쉽게 꺼내지지 않았고, 결국 남는 이들도 많지가 않았다. 모두가 공감하듯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다양한 인프라 때문이다. 볼 것, 배울 것, 놀 것들이 충분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다. 그것이 늘 중앙이 부러운 이유지 않았나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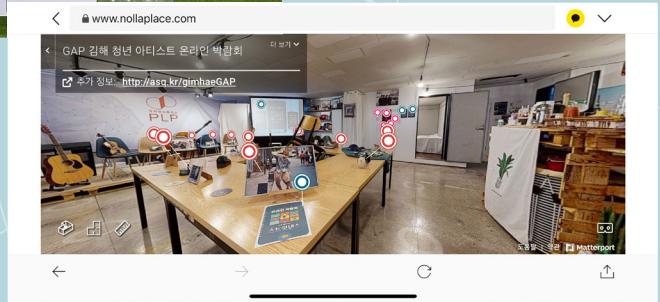
2006년,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도전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를 기획하며, 경남출신의 뮤지션들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축제를 만들었다. 이 축제는 올해 16회를 맞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주도, 시민펀딩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하는 뮤지션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많은 뮤지션들이 연락이 오기도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되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뮤지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금은 더 좋은 무대, 보다 차별화된 협업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지역내에서 필요를 채워내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있어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비용이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시작한 것이 작은 클럽형태의 공연장사업을 하면서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하는 계기가 생겼다. 주로 해외뮤지션들의 내한공연이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지역이나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참 다름을 느끼면서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들은 서울이나 김해를 크게 다르지 않게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시기 이후로 몇몇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

탈중앙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지역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등의 이야기들이 거론되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기대들이 많다. 어쩌면 조금 소외받고 있던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 다양한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의 퀄리티 상향평준화등에 대한 기대가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녹음없DAY'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조성은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지향적 대안임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되고, 벌써 2년째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문화예술분야는 오프라인 기반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급변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하여 대응하는 힘이 쉽지만은 않다. 미디어나 기술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등의 콘텐츠 역시 중앙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붕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권역에 있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은 각 지역별로 차별된 인프라들이 조성되어 있고, 협업 시 큰 시너지를 내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앞으로의 트렌드는 문화 예술인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보다는 기술을 연계한 콘텐츠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아직 이 부분에 대응한 동남권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것들을

연계한 제대로된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직의 이동이 편리한 상황이라 수직선상에 많은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다. 경부울 지역은 수평선상에 있다 보니 이동이나 활동들의 연계가 쉽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대되는 영역이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은 같은 문화권내에서 협업 시 일어날 새로운 시너지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아시아의 문화허브로서 좋은 모델을 갖추고, 확장해나갈 때, 사람과 사람의 연결, 문화와 문화의 연결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동남권 문화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자생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문화들이 창작되고 확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시대적 이슈인 지속가능성의 분야에서 고민되고 있는 문화 예술영역의 일진보를 통해 지역문화의 새로운 부흥기가 될 것을 꿈꿔본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또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제는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다. 일 년 남짓 정책연구센터가 애써 들인 공력이 만만치 않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 항목이다. 사실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현황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 활동가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로 귀결된다.

이 관점에서 보고서는 정책 개발의 패러다임을 가다듬느라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고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에 이어, ‘부산 특화 사회문제 유형화’와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사례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결론 부분에서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를 분명한 논점으로 제안한다. 연구팀의 노력과 공력이 돋보이는 이유다.

보고서는 먼저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화정책에서 핵심 가치가 변해온 흐름을 시대별로 요약한다. 1940년대 치유 가치, 1960년대 향유 가치, 1990년대 경제적 가치, 2000년대 교육적 가치, 2010년대 도시재생 가치, 2020년대 사회적 가치. 이때 정책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란 단어의 포괄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사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가치인지, 아니면 기존의 핵심 가치들을 모두 포괄(해아)하는 것인지.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현재의 사회적 가치를 1940년대 치유 가치와 연결한다. 이 연결의 매개가 되는 것은 코로나 19다. 말하자면 “코로나 19 위기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의 애드보커시 기회로 활용하자”(13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대별 핵심 가치의 스펙트럼은 1940년대와 2020년대가 치유 가치로 맞물리는 형태의 둥근 원을 이루게 된다.

분명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코로나 19는 하나의 동일한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인 집단 경험이다. 이 집단 경험의 범위는 1940년대의 세계대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고서는 오늘날 문화활동의 초점을 코로나 19의 정신적 상처 치유에 맞추며, 문화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하는 것 같다. 1940년대 영국이 예술활동의 중심을 세계대전의 정신적 상처 치유에 두며 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치유로 제한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이 도시정책의 중심에서 도심부 활성화, 지역커뮤니티(마을만들기), 산업, 교육, 복지 정책과 연동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속에 기존의 가치(치유, 향유, 경제, 교육, 도시재생)를 모두 포함시킨다. 또 미국 AFTA(Americans for the Arts)의 ‘지역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인용한다. 이때 치유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리해진 사회적 가치 개념이 ‘뭉뚱한’ 개념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보고서는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과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포괄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즉 [‘문화정책이 시대와 함께 바뀌고 있다’ ⇒ ‘사회적 가치는 2020년대 패러다임 변동에 부합한다’]며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을 말해놓고, 그 뒤에 기존의 가치들을 모두 한데 묶어 포괄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색하다는 말이다.

이런 혼란은 아무래도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을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단지 양적인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며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9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사회(공동체)는 확연히 바뀐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란 것, 공동체란 것 자체가 거의 와해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는 사회 성원들의 신체적인 ‘공통 감각’도 거의 없고, 공동체에 대한 ‘공통 기억’도 거의 사라졌다. 현재 20대(1995년 이후 출생) 청년 가운데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놀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처럼 사회(공동체)가 와해된 원인으로는 앞서 말한 세계화와 함께 사회 시스템의 ‘전문 관료화’와 정보기술(IT) 발전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된다(관료화와 IT는 상호작용·결합한다). 이 관점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의 비대면 기술·문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사회의 몰락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몰락은 몰인격화, 곧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그 결과가 이른바 ‘사회문제’다).

2020년대 문화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은 이 맥락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보다 <사회라는 것 자체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예술이 레저(여가), ‘리-크리에이션’(재충전), 오락(엔터테인먼트), 테라피와 다른 이유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단지 심신을 쉬게 하고 상쾌하게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이 삭막해진 사회에서 함께할 ‘동료’를 만나게 하고, 나름 대로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며, 현재 사회의 ‘외부’를 함께 꾸꾸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사회(공동체)의 재건’이 말 그대로 과거 사회의 복구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현재 사회의 몰인격화 과정에서 저하된 인간의 감성·감정을 드높이고, 공통 감각, 공통 기억을 새로, 함께 만들어 간다. 이 활동을 넓은 뜻에서 ‘커뮤니티 아트’로 부를 수 있다. 이때 커뮤니티 아트는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마을)에 들어가는 활동이라기보다 <새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것은 인식 활동(문학, 영화)에서도, 신체 활동(음악, 무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예술 활동과 다른 점은 공통 감각, 공통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동체)적 지향성에 있다.





또 2020년대 사회적 가치의 특수성은 기술 발전에 있어 대안적 기술 마련을 과제로 포함한다. 지면이 한정되어 길게 쓸 수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IT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기술이 공동체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면이 있는 반면 공통 감각, 공통 기억, 공동체성을 살리는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도 현재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2020년대 사회적 가치는 기존의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말이다. 1940년대와 2020년대의 치유 가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사회가 거의 와해됐다. 그럼에도 코로나 19에 관한 보고서의 제안은 분명 유효하다. 이 세계적인 집단 경험은 확실히 유대감, 공감,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레베카 솔닛의 말처럼 “재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도 있다(『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은 그보다 더 강한 도움, 연대, 돌봄, 즉 사회(공동체)가 자라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말 그대로 사회 자체를 재건하는,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중요한 계기다. 이 계기를 지렛대로 삼아 다양한 영역(이른바 사회문제들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와 타 분야 정책 간의 “관계 횡단적 관점”(72~75쪽)일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재미가 있는지, 몰입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나름대로 문화 수준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 기획자들이 무리하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의 수준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 구성을 보면, 사례(국내외, 부산지역) 조사가 총 127쪽으로 전체 분량 163쪽의 78%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문헌 조사이거나 ‘우리는 이렇게 활동한다’는 수행 단체의 자기 선언을 그대로 인용한 조사가 많은 데 비해, 실효성 조사는 많지 않다.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고, 제3자의 의견, 평가도 거의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 보완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7~8월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문화도시 부산”  
부산문화재단,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8.6)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과 함께 잇는 예술의 즐거움”(7.1)

부산문화재단(대표 강동수, 이하 재단)은 7월 장애  
예술인 창작 공간 온그루에서 지역 장애인의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함께 이어지다>를  
운영하고, 참여 장애인을 모집하였다.

## # 문화체육관광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7.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  
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출범(7.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1기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  
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7.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위원장 최병규)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7월 29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 # 지역문화진흥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7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7.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  
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문화가 있는 날’(7.28)과 해당 주간(7.26~8.1)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안전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지친  
국민을 위로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확장 가상세계에서 문화 분야 정보화 성과 공유하다(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한국  
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7월  
27일(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한  
‘2021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혁신 성장 선도를  
위한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혁신계획」 수립(7.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  
은 2021년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기관 혁신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 13~14일 양일간  
온라인 개최(7.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 단위 거점\*\*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오는 7월 13일(화)~14일(수) 양일간 각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에서 무료로 공연홍보 해드려요!”(7.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중소기업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 무료로 공연홍보물을 제작해주고, 티켓 판매홍보를 지원하는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홍보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7.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에 수어 통역과 문자통역을 도입하고,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 없이 즐기는 No Limits in Seoul 프리뷰 행사 온라인 개최(7.27)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 이하 장문원)은 2021 무장애예술주간 프리뷰를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장문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웨비나, 무장애 예술주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 ‘We are in green-영아트’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2회 공연 성료(7.5)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은 지난 4월 선정된 「2021년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의 2회 공연을 30일 오후 5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NH 농협은행 경남본부, 지역 영상산업 위해 2억 2천만 원 기부(7.6)

NH농협은행 경남본부(본부장 최영식)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에 경남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다.

### #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로’ 빛고을 곳곳 물들이다(7.12)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광주예술로)’는 지역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국비사업이다. 올해는 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과 기업·기관 11곳이 선정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 대구문화재단

범어아트스트리트의 새 이름, 창작·창업 예술실험 공간 「ArtLab:범어」로 확정(7.6)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가 새로운 명칭인 창작·창업 예술실험 공간 「ArtLab:범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서울문화재단, 30억 원 예술인 지원...시민에 문화향유 기회, 문화예술계엔 활력(7.22)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이 총 3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지원」을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작은(小) 힘 모아 예술을 웃음(笑)지게 해요!(8.2)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은 누구나 예술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소소한 기부>의 모금을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진행했다.

### # 세종시문화재단

‘제3차세종문화도시포럼’ 시민참여 방안을 말한다(7.14)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제3차 세종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종시문화재단, 청소년예술캠프 ‘코드로 그린 한글 그림’ 운영(8.3)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청소년예술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예술 캠프는 ‘예술과 과학의 결합’을 주제로 미디어·과학분야인 ‘코딩’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를 예술 활동에 접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 # 울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코로나19 시대에 주목 받는다(7.12)

(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전수임)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통해 7월 13일부터 지역의 전문공연단체와 함께 코로나 19로 문화 활동을 누리기 어려운 기관에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한다.

###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 대상 인천예술인 e음카드 발급(7.5)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artist.ifac.or.kr)를 통해 인천예술인 e음카드의 발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 전라북도 예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7.2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술인 의료비(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 # 제주문화예술재단

색색의 민간 문화공간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봉화를 올리는 “지원사업 공모 접수!”(7.2)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이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 지역문화의 미래를 민간 문화공간과 함께 실험하는 <그치.가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를 7월 1일(목)부터 7월 22일(목)까지 접수한다.

### # 부산연구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협력사업 초청강연회- 문학으로 비추어 보는 피란수도 부산’(7.26)

문학작품에 그려진 피란수도 부산을 살펴보는 학술행사가 개최한다. 부산연구원은 28일(수) 오후 2시 줌(Zoom) 온라인으로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협력사업 제3차 초청강연회 및 포럼- 문학으로 비추어 보는 피란수도 부산’을 개최한다.

### #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 현장, 같이 땀시다”(7.2)

(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금정문화재단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나도 현장을 땀다’를 통해 일반인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기 시도한다.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1. 08. 26.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예인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713 411008  
ISSN 2713-4113